



주간통일정세 2013-49(2013.12.02~12.0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3-49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신문 "혁명적 신념서 탈선하면 용서치 않는다"(12/0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이 제기된 다음날인 4일 "혁명적 신념에서 탈선하면 누구든 용서치 않는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신문은 '혁명적 신념은 목숨보다 귀중하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혁명은 곧 신념이고 의지이며 배짱이라는 것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간곡한 유훈"이라며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정을 주장함.
  - 더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영원한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일편단심의 그 한길로만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민들 모두의 혁명적 신념을 억년 드놀지(흔들리지) 않게 받들어주는 초석"이라고 덧붙임.
  
- **北, 김정은에 충성 독려..."인민·수령은 혼연일체"(12/0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남한 정보당국이 장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을 제기한 지 이틀째인 5일 '창성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연이 깊은 창성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면서 선대의 전통을 계승해 이곳에 애착을 보이는 김 제1위원장의 '충정에 초점을 맞춰 보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창성을 직접 찾아 새로 리모델링한 창성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이는 선대의 유훈을 꽃피우기 위한 그의 충정과 헌신성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함.
  - 더하여 김 제1위원장이 당시 창성과 선대의 인연을 회고하면서 "아버이 수령님을 따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걸어온 창성의 길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역사에 대하여 깊이깊이 새겨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함.
  
- **北 박봉주·최룡해, 건설강습 참가자 숙소 방문(종합)(1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박 총리가 창립 61주년을 맞은 국가과학원을 찾아 과학전시관을 돌아보고 새 기술과 제품 개발에 노력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함.
  - 박 총리는 이어 현지에서 '일꾼협의회'를 열고 은정과학지구를 정보기술, 나노기술, 에너지공학 등 첨단과학기술의 개발·보급기지로 잘 조



성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함.

- **北, 주이집트 대사에 박춘일 임명(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이집트 주재 대사에 박춘일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건설사업 책임자 총집결... "건설 최번영기 열자"(12/8, 연합뉴스)**
  - 북한이 8일 개막하는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주요 건설사업 책임자들이 총집결하는 행사인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은 '주체 건축예술의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달 1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며 이번 행사에서 올해 건설사업을 결산하고 내년 사업의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北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도 '장성택 기사' 삭제(12/8, 연합뉴스)**
  - 북한이 실각설이 제기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을 기록영화에서 삭제한 데 이어 관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에서도 그와 관련된 기사를 없앤 것으로 8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이날 오후 중앙통신 웹사이트 검색창에 '장성택'을 입력한 결과 과거 기사는 나오지 않고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이라는 문구만 떴으며 그의 측근으로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리룡하와 '장길수'를 입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임.
  
- **北, 장성택 모든 직무 해임...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종합)(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당으로부터 출당·제명키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이 9일 발표한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는 장성택에 대해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 단결을 쪼먹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밝힘.



■ **김정은동향**

- 12/1, 김정은 黨 제1비서, 12.1 라오스 국가주석('쫘말리 싸이나손')에게 '라오스 창건 38주년' 축전(12.1, 중통 · 중방)
- 박봉주 내각 총리 · 박의춘 외무상도 12.1 라오스 수상('통쑹 탐마윙')과 부수상겸 외무상('통룬 씨쑤릿')에게 각각 축전(12.1, 중통 · 중방)
- 12/5, 김정은 黨 제1비서, '원군사업' 등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5, 중방)
- 12/8, 김정은 黨 제1비서, 모범선동원들에게 '감사' 전달(12.8,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사망(12.17) 2주기 즈음 쏘민의 '김정은 영도 따라 김정일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실현하자'고 강조(12.1, 중방 · 중통 · 노동신문/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끝까지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 김정은 저작 발표('12.12.1) 1주년 관련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세계적인 강국, 사회주의 선진문명국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12.1, 중통 · 노동신문 · 중방/주체의 사회과학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힌 불멸의 대강)
- 김정은 저작 :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김일성-김정일의 조국관·혁명관·인민관은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하다'고 칭송하며 '인민의 행복이 현실로 꽃피나고 사회주의 부귀영화의 새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원수님(김정은)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칭송(12.2, 중통 · 노동신문 · 중방/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 박봉주 내각 총리, 국가과학원사업 현지 요해 및 과학자 - 기술자들 격려와 관계부문일꾼 협의회 개최(12.7, 중통 · 중방)
- 박봉주 · 최룡해 · 김기남 등 당과 국가 · 군대 책임일꾼들, 12.7 건설부문일꾼 대강습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12.7, 중통 · 중방)
- 건설부문일꾼 대강습 참가자들, 12.7 만수대언덕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 및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 열사묘 참관(12.7, 중통 · 중방)

나. 경제

● **北총리, 자강도 강계시 경제현장 찾아 협의회 주재(12/0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총리가 자강도 행정중심지인 강계시의 여러 경제현장을 찾아 협의회를 열고 간부들을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박 총리는 강계포도술공장, 강계돼지공장, 흥주닭공장, 강계목재가공공장 등을 찾아 생산실태를 점검하고 관계부문 간부 협의회를 주재했으며



협의회에서 "실정에 맞게 올바른 경영전략을 세우고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北 "각지에서 연간 생산계획 초과 완수" 연일 선전(12/0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강선금속압연공장 노동계급이 12월 1일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전날에는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연간 시멘트생산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했다"는 소식을 전함.
  - 앞서 지난달 28일 조선중앙통신은 "원산제염소에서 연간계획을 완수했다"라며 "장마철 대책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날씨에서도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었다"고 소개함.

#### 다. 사회·문화

- 北 예술학교 '꼬마 전자악단' 국제공연서 '인기'(12/02, 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홍보용 잡지 '금수강산' 12월호에서 '재청 받은 어린 연주자들'이라는 글을 읽고 평양 금성학원 전자악단이 국제 음악행사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소개한 것을 2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이 잡지는 이 전자악단의 나이 어린 연주자들이 올해 5월 러시아에서 열린 제10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벚들을 맞이한다'에 참가해 수준 높은 노래와 연주로 앙코르 요청을 받았다고 자랑함.
- 北에서도 '김밥 대중화'...유명식당서도 인기메뉴(12/0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더욱 대중화되는 김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예전엔) 별식처럼 해먹던 김밥을 최근 평양의 능라인민유원지, 개선청년공원, 문수물놀이장의 청량음료점들과 각지 간이 매대에서 특색 있게 만들어 내놓아 인민들을 기쁘게 한다"고 전함.
  - 이어 "각 도 봉사기관(식당)들과 곳곳에 설치된 야외 매대들에서도 김밥은 손님들이 즐겨 찾는 간이음식으로 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특히 평양 모란각 같은 유명 식당에서도 김밥이 인기있는 메뉴가 됐다고 소개함.
- 北 "전문가 되자"...석·박사 학위 따기 붐(12/03,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3일 입수한 민주조선 11월 22일지는 김일성종합대 계몽상능업대학 국토건설학부의 교원과 연구사 전원이 학위를 갖고 있다고 소개하며 북한에서 학위가 개인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증표로 떠오르면서 이를 취득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민주조선은 "당의 과학기술중시 사상을 높이 받든" 사색과 탐구의 산물이자 "높은 실력으로 당의 후대(後代)교육 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노력의 열매라고 평가함.



- '체육강국' 꿈꾸는 北..."목표는 올림픽 15위권"(12/03,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3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월간 '조국' 12월호는 '새로운 전성기를 펼친 조선의 체육'이란 글에서 한 체육 관계자를 인용해 "체육강국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는 체육 종목들의 기술이 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큰 규모의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 획득 수를 세계 10~15위권 내에 속할 수 있는 수준에 올려세우는 것"이라고 밝힘.
  - 이 잡지는 올림픽에서 200여개의 국가가 25~30여개 종목에서 300여 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는데, 통상 40~50여 개 국가가 금메달을 휩쓸어 가므로 금메달 10개만 획득하면 종합 순위 10~15위권에 들어 세계적인 체육강국으로 당당하게 불릴 수 있다고 설명함.
  
- 北 '장애인보호법' 개정...국제기준 반영(12/06, 조선신보)
  - 북한이 장애인 복지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난달 21일 '장애인보호법'을 개정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보도함.
  - 북한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조선장애인보호연맹 중앙위원회의 정현 부장은 법 개정이 "사회발전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장애인보호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조선신보에 밝힘.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北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가입..."해상운수 발전 노력"(12/02, 조선중앙통신)
  -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장은 연설에서 북한이 해상운수 발전에 힘쓰고 있다며 "해상안전 분야에서 지난 10월 15일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힘.
  - 북한 단장은 해상탐색구조 분야와 관련해 동·서해안 25개 지역에 초단파연안무선대를 설치,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고 해상환경의 보호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北, 美 '비핵화 구호' 또 비난..."행동으로 보여라"(12/0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호를 비난하며 핵 군축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함.
  - 신문은 '미국의 비핵세계 구상의 기만성은 드러났다'는 제목의 글에서 "핵무기를 세계지배 야망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 비핵세계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함.



- **北 통신 "日 정치인 여성인권 논할 자격 없다"(12/0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일본 정치인들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군국화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난함.
  - 중앙통신은 '수치스럽지도 않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여성 인권을 강조한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극우익으로 질주하는 일본이 국제무대에서의 영상(이미지) 올리기에 몰두하는 것은 과거청산 없이 군국화어로 질주하기 위한 내외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1~10월 대중국 무역, 작년보다 6.2% 늘어(12/04,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북한의 중국을 통한 각종 물품 조달이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중국해관(세관)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한은 중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23억 6천만 달러 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14%가량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들어 수입액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임.
  
- **北 통신 "美, '北 위협' 빌미로 동북아 신냉전 초래"(12/0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무력을 증강 배치하며 신냉전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최근 'P-8A 포세이돈' 첨단 해상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등 동북아에서 '무력증강 책동'을 벌이며 "새로운 냉전을 불러오는 화근"이 되고 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미국이 동북아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이유로 '북조선 위협설'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주범으로서의 정체를 가리고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주장함.
  
- **北 관광 고위 대표단, 대만 방문(12/0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고위 관리들이 내주 대만을 찾아 관광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만 중앙통신(CNA)을 인용해 5일 보도함.
  - CNA는 조성규 북한 국가관광총국 부국장 겸 조선국제여행사 사장과 관리 2명으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이 이달 9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항공편을 통해 타이베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4일 보도하며 이번 방문의 표면적인 목적은 이달 11~15일 카오슝(高雄)에서 열리는 '2013 아시아 관광 회의' 참석이라고 밝힘.



- **美 재무부, 北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12/06, 미국의소리(VOA))**
  - 미국 재무부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가 미국 금융기관들에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FinCEN은 지난 5일 발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목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 결함 국가와 관련한 주의보'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북한과의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힘.
  
- **北 김영남 "남아공 정부와 인민에 애도"(12/6, 연합뉴스)**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6일 벨스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타계한 데 대해 "남아공 정부와 인민, 고인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에게 보낸 위문 전문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을 "남아프리카 인민이 낳은 훌륭한 아들"이라고 칭하며 이같이 말함.
  
- **크리스마스 북한관광...판매부진에 취소(12/6, 텔레그래프)**
  - 북한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외국인 대상 관광 일정이 취소됐다고 6일 (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광상품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동 여행사는 오는 24일부터 5일간 북한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크리스마스 관광을 추진했지만, 상품 판매가 부진해 취소함.
  
- **中, WFP 통해 100만 달러 대북 식량지원(12/7, 미국의소리(VOA))**
  - 중국이 지난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전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중국의 식량지원 소식을 밝혔으며 WFP는 북한에 있는 취약계층 239만 3천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데 이 자금을 쓸 계획이라고 설명함.
  
- **北, 국제 사모펀드와 희토류 개발(12/7,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들어가는 희소자원인 희토류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 사모펀드와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국제 사모펀드인 'SRE 미네랄스'는 평안북도 정주에서 희토류를 개발하려고 북한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최근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北, 억류 미국인 메릴 뉴먼 42일 만에 추방(종합2보)(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메릴 뉴먼(85) 씨를 추방했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뉴먼 씨는 북한에서 '적대행위' 혐의로 억류된 지 40여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뉴먼 씨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추방했다며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저지른 행위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심심하게 누우친 점과 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발표함.
  
- **北 신문 "美핵무기 철수가 한반도 평화 선결조건"(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세계평화의 선결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며 "이것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미국은 자그마한 남조선 땅을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이것도 모자라 대량살육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며 미국이 북침을 목표로 '핵전쟁연습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 ■ 기타 (대외 일반)

- 北 대표단 단장, 11.26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28차 회의에서 '우리(北)는 앞으로 기구 성원국들과 친선협조관계 강화발전, 항해 안전과 해상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 표명(12.1, 중방·중통)
- 北 - 中 공동미술전시회(만수대창작사-동방문화예술원 공동주최, 北 - 中 친선 주제 미술작품 등), 11.30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12.1, 중방·중통)
- 중국 상무부·문화부, 11.29 '북-중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0주년 연회 개최(12.1, 평방·중통)
- 北,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은 저들의 핵우위에 의한 세계제 패야망 실현책동을 감추기 위한 병풍에 불과하며, 핵군축타령은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비난 및 '핵군축에 대한 실지 행동'을 촉구(12.2, 중통·노동신문/미국의 비핵세계구상의 기만성은 드러났다)
- 【중통 논평】 日 당국자의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한 발언(여성들에 대한 폭행 근절, 여성인권 보호) 관련 "철면피성을 또다시 드러낸 언동"이라고 비난하며 "일본이 여성의 권리에 대해 말하려면 일본군 성노예범죄부터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12.3, 중통/수치스럽지도 않은가)



- 美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위안부소년상' 건립 관련해 日 의원의 '항의' 움직임에 대해 '과거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망동으로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만의 무리들'이라고 비난 및 '과거청산' 촉구(12.3,중통·민주조선/과거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일본반동들의 망동)
- 「중통 논평」 미국의 '亞-太지역 중시 및 무력증강 계획(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도입 검토 등)'과 동시에 '북 위협설' 주장은 "새로운 냉전을 불러오는 화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12.4,중통/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행위)

나. 6자회담(북핵)

- 北 신문 "도발책동 계속되는 한 핵 억제력 강화"(12/0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에서 '핵 선제공격'을 기도하고 있다며 핵개발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힘.
  - 신문은 '핵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민족수호의 보검'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올해 핵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등을 언급하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 타격 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고 비난함.
  - 이어 북한의 '핵 억제력'은 흥정물이 아니라고 못박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6자회담(북핵))
  - 韓美가 "핵 선제 타격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핵 억제력 강화' 지속 강조(12.3,중통·노동신문/핵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민족수호의 보검)
  - 조선의 핵은 지구상에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며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 통일조선의 국보임.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신문, 제정 65주년 국보법 철폐 주장(12/0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제정 65주년을 맞은 국가보안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세력 탄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보안법은 전대미문의 반민주적 파쇼악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보법이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8년 12월 1일 제정됐다고 소개하고 "보안법 철폐는 유신독재가 되살아난 남조선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고 밝힌.

- **北 종교단체도 南 반정부투쟁 선동…"성전에 나서라"(12/02, 연합뉴스)**
  -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이 박근혜 정부를 '사탄의 무리'라고 규정하며 국내 기독교계에 "성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조그련 중앙위원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양심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온 남조선을 파쇼의 난무장으로 만들고 동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으며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사탄의 무리들을 몰아내는 정의의 성전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北 문예단체도 南 반정부투쟁 선동(12/03, 연합뉴스)**
  - 북한의 문예단체인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중앙위원회가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집권세력이 '유신독재 부활'에 나서 반대세력을 '중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며 "오늘 남조선의 처절한 현실은 문예인들이 진리를 밝히는 횃불, 정의의 기수가 돼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선봉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문예총은 이어 "남조선의 문예인들은 시대의 앞장에서 정의의 선도자가 돼 괴뢰보수 집권세력의 극악한 중북몰이 소동을 유신독재 부활 저지, 파쇼통치 심판, 동족대결 반대 투쟁으로 과감히 짓부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南 훈련병 반복 구호 비난…"특대형 도발"(12/04, 연합뉴스)**
  - 북한이 남한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가 훈련병들에게 반복 구호를 외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남한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 들며 입에 담지 못할 극악무도한 구호를 외치게 하는 도발 광대극을 벌여놓았다"며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특대형 도발로서 천추에 용납 못 할 범죄적 망동"이라고 밝힌.
- **北 "대남 선동 '내정간섭' 아냐…계속할 것"(12/0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괴뢰들의 내정간섭 궤변은 중북 소동을 정당화하고 날로 고조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기운을 거세해 보려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 이어 "우리는 괴뢰 패당이 우리를 걸고 중북 광란을 일으키며 정의와 민주를 위한 남조선 인민의 투쟁을 탄압하는 데 대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동족으로서 남녘 동포들의 투쟁에 계속 지지·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임.

● **北, 南 교과서 수정명령 비난... "동족대결 부추겨"(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교육을 관장하는 내각 산하 교육위원회는 6일 교육부가 최근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수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남한 청소년들에게 '동족 대결의식'을 고취하려는 교과서 '개악' 시도라고 밝힘.  
 - 교육위원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남조선의 청소년들에게 반공화국(북한) 적대감과 반동적 역사관을 주입해 남조선 사회를 더욱 보수화, 파쇼화하고 유신독재를 기어이 부활시키려는 박근혜 패당의 흥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北 「농근맹」 대변인 담화(12.1), '2013 전국농민대회(11.22 서울, 韓·中FTA 반대 등) 개최 등 관련 '남조선 농민들은 반파쇼민주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파쇼통치를 끝장내야 한다'고 '반정부 투쟁' 선동(12.1, 중통·중방·평방)
  - 현재 "남조선에서는 유신망령이 되살아나 살판치고 있다"며 '전교조' 문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지속 거론 및 '반정부 투쟁' 선동(12.1, 평방/살판치는 현대판 유신독재)
  -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시국미사'는 "괴뢰정권 타도 투쟁에 종교계도 적극 합세, 4.19인민봉기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선동 지속(12.1, 평방/날로 확대되고 있는 정권퇴진 투쟁·통치위기 수습을 노린 파쇼광대극)
- 【北 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12.2)】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수사 등 관련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행위와 중세기적인 중북물이 광기를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로 낙인한다'며 '사탄을 몰아내는 정의의 성전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라며 '반정부 투쟁' 선동(12.2, 중통·평방)
-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총대변인 담화(12.3)】 南 집권세력이 '각계층의 대중투쟁을 '중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며 "문예인들이 정의의 기수가 되어 민주·통일을 위한 선봉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南 문예인들의 '반정부 투쟁' 선동(12.3, 중통·중방)
-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 대담(12.4), 남한 훈련병들(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 '2013년 14기 수료식')의 구호(3대 세습 추종하는 중북 쓰레기 몰아내자) 제창은 "최고존엄 모독, 특대형 도발"이라며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 위협(12.4, 중통·평방)



- 韓美의 '北 미사일 위협' 공동전략 수립(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과 연합사단 창설방안 검토, 남한 국방력 강화 등 재차 거론하며 '北, 핵억제력 강화발전 및 병진노선 정당성' 및 '북핵 강화' 주장(12.4, 평방/북침을 노린 군사적 결탁)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5호(12.5)】 우리 정부 및 새누리당에서의 對北발언(대남 반정부 선전·선동 강화 및 내정간섭) 관련 '중북 소동을 정당화하고 반정부 투쟁기운을 거세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남북동포들의 의로운 투쟁에 계속 지지 성운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12.5,중통·중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늘려”>(美싱크탱크)>(12/6, 연합뉴스)
  -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5일(현지시간) 3일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 결과 영변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속의 수증기는 영변의 노후화된 플루토늄 원자로에 쓰일 연료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 재처리공장이 가동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ISIS 보고서는 지적했으며, 동절기 난방으로 인해 생겨난 수증기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또한 ISIS는 “영변 핵시설이 원심분리기 주변의 냉각 수조로 보이는 구조물 건설을 포함해 확대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최근 위성사진은 영변 핵시설 가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나. 미·북 관계

- <北 통신 “美, '北 위협' 빌미로 동북아 신냉전 초래”>(12/4,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최근 'P-8A 포세이돈' 첨단 해상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등 동북아에서 '무력증강 책동'을 벌이며 “새로운 냉전을 불러오는 화근”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어 미국이 동북아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이유로 '북조선 위협설'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주변국으로서의 정체를 가리고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 또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고 덧붙였다.
- <北, 억류 미국인 메릴 뉴먼씨 추방...“인도주의 조치”>(12/7, 연합뉴스)
  - 북한은 7일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메릴 뉴먼(85) 씨를 추방했다고 밝혔으므로써, 뉴먼 씨는 북한에서 '적대행위' 혐의로 억류된 지 40여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 북한이 특사 파견 등 미국 정부의 노력이 없었음에도 뉴먼 씨를 추방한 것은 고령으로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국제사회의 비난이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뉴먼 씨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추방했다며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저지른 행위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심심하게 뉘우친 점과 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발표했음.

#### 다. 중·북 관계

- <장성택 '실각' 北경제사업은…중북경협 위축 가능성>(12/6, 연합뉴스)
  -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 이후, 그가 경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가 추진해온 경제 사업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차질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중북 간 경제협력으로, 장성택이 직접 지휘해왔던 황금평·위화도와 나선경제특구의 변화가 예상되며, 장성택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온 각종 무역회사, 기업소도 중국과 교류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간담회에서 "황금평의 경우 공개적으로 장성택이 책임지는 게 있으니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음.
  - 다만, 국정원이 장성택의 최측근이 처형됐다고 밝힌 11월 하순 이후에도 김정은 체제 들어 재기한 경제관료는 건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성택이 실각하더라도 북한 경제정책의 큰 줄기가 바뀔 것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름.

#### 라. 기 타

- <스티븐스 前대사 "북한은 지역통합 장애물이자 촉매">(12/3, 연합뉴스)
  -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 UC버클리의 동아시아연구소(IEAS)가 개최한 한중일 3국간 현안 세미나에서 "북한이 동아시아의 지역적 통합에 장애물이면서도 촉매가 되고 있다"는 역설적인 분석을 제시했음.
  - 스티븐스 전 대사는 "아직 아시아의 경제적 통합은 이 지역의 집단적 혹은 협력적 공동안보체제 형성에 믿음직스러운 기반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 오히려 북한이 촉매가 돼 이 지역 나라들 사이의 6자회담과 같은 협의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 이어 그는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많다"며 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가치 중심'의 통합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美전문가 "中 방공구역 논란에 북핵대화 실종 우려">(12/5, 연합뉴스)
  -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내·외신 기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모두 북한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중국



- 의 발표로 대화 재개의 기회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 특히 그는 최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도 비핵화 회담 재개 논의를 계속 진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지만 역내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과 미·중간 논쟁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북한 이슈는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진단했음.
  - 이어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지목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 양국의 관계 복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록히드마틴 "한국 F-35 일본서 정비하는 일 없다">(12/5, 연합뉴스)
  - 미국 록히드마틴은 4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연 간담회에서 한국이 차기 전투기(F-X)로 F-35A의 구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이를 도입할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일본이나 미국 본토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 정부 간 계약인 FMS 방식을 채택했지만 한국에 군사 위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을 위한 기술 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음.
  - 이런 발언은 한국 내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되며, 미국 정부가 그동안 FMS로 판매하는 무기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에 인색한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 일부 정치권 등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판단됨.
- <한미 방위비협상 입장차 여전...10일 회의 속개>(12/5,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국무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8차 고위급 협의를 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음.
  - 외교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내년도 방위비 총액, 방위비 협상 유효 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의 쟁점을 놓고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기초로 심도 있고 상세한 협의를 했다"며 "서로 이해를 높이고 일부 진전을 이룬 부분도 있으나 아직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한편, 한미 양국은 이달 중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 아래 10일부터 서울에서 제9차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 <美, 고심끝 KADIZ 확대 '동의' 가닥...中견제 노림수>(12/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KADIZ 확대문제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미국이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 미국이 한국 정부의 KADIZ 확대를 인정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논리와 명분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졌고,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정책 추진의 '방법론'과 KADIZ 운용의 '내용성'도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는 중국이 보였던 행보와는 반대로,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새로 포함되는 이어도 수역 등은 분쟁지역이 아닌데다,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일체 표명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에게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외교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 나. 한·중 관계

- <中 "한국 방공구역 확대, 국제법·실천에 부합해야">(12/2,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추진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아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방식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홍 대변인은 또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구역 설정 후 관련국가들과 소통해왔으며 이 국가들에 중국의 합법적인 안보 우려와 자위권을 이해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한편, 홍 대변인은 6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공식별구역은 영해와 영공에 대한 관할권과 무관하다며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 2일과 동일한 의견을 재차 밝혔으며,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中 "韓 TPP행보, 한중 FTA 협상에 영향 안줄것">(12/4, 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는 4일 한국이 최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 한중 FTA 협상에는 당분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망은 쑤위안장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은 이날 열린 자유무역지역 건설관련 언론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정식 TPP 가입을 위해서는 쌍방의 협상 등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 그는 이어 한중 FTA는 8차례 진행됐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무역관련 세금 하향 조정과 협상 범위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진 단계"라고 소개했다.

#### 다. 한·일 관계

- <日 "역사문제 외교문제화 안돼...공동교과서는 불가능">(12/4, 연합뉴스)
  -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 3일 외무성 초



청으로 도쿄를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역사 문제는 외교문제화하면 안 된다.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한국이 싸울 게 아니라 지금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 이어 그는 위안부 보상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최근 발견된 3·1운동 순국선열과 관동 대학살 희생자, 강제징용 피해자 명부도 마찬가지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 한편, 아베 내각은 역대 내각의 인식과 같이 "침략 및 식민지 지배에 관해 아베 내각이 그것을 부정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제안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로 서로의 인식을 좁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과서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일본, 동중국해 '바위' 3개→섬으로 명칭변경>(12/4, 연합뉴스)

-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시는 동중국해 도리시마를 구성하는 기타이와, 나카이와, 미나미이와 등 3개의 바위를 '섬'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함.
- 니혼케이자이신문 등은 이 주변에서 한국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고, 바위들이 실제로는 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했으며, 이들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라는 것을 주변국에 명확하게 알리려는 행보라고 전했다.
- 이는 한국과의 EEZ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 이들 바위 3개를 섬으로 인정해 기점으로 삼으면 일본 EEZ의 범위가 한국 쪽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한국은 1996년부터 일본과 해양 경계를 나누려고 EEZ 협상을 시작했으나 독도에 대한 견해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 <“日, 韓에 이어도 ADIZ 양보해야”<블룸버그>>(12/4, 연합뉴스)

- 블룸버그는 3일(현지시간) '물속 암초가 한국과 일본을 이어줄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이어도까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해 한국의 반발을 산 것은 패착이라고 평가하며 일본이 이어도 상공의 방공식별구역을 한국에 조금만 양보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방공식별구역을 조금 축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안보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 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 블룸버그는 일본이 이어도 상공의 JADIZ를 한국에 넘겨준다면, 센카쿠 영유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하는 중국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한편, 역사 인식 문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환영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라. 미·중 관계

- <미국 "중방공식별구역 설정 불인정 입장 불변">(12/3, 연합뉴스)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국제 규범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합법적 조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음.
  - 이어 미국 정부가 자국의 민간 항공사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라고 권유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이중잣대' 논란에 대해서는 "승객 안전과 ADIZ 수용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쟈 스키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ADIZ를 선포했으며, 선포한 구역이 일본, 한국, 대만이 오래 유지해 온 구역과 일부 겹치고 일본이 점유한 영토를 포함한다"며 "중국의 선언이 혼란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음.
  
- <"미국이 일본 편들면 진전 없다">(차이나데일리)<(12/4,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잘못되고 편파적 발언"을 반복한다면 긴장 완화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신문은 또 동중국해 분쟁에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바이든은 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에 일본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은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양측이 의미 있는 대화와 위기관리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다시 한 번 때를 맞춰 찾아오는 방문자에게 말해준다"면서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일본이다. 중국은 일본의 도발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 <바이든, 중방공식별구역 반대 천명...美中 '대립각'>(12/5, 연합뉴스)
  -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미국 상공인들과 만나 "중국이 최근 갑작스럽게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당연히 미국을 포함, 지역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했다"고 밝혔음.
  -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심한 듯 공개 석상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강력한 반대 견해를 천명한 것은 대중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행동으로 풀이됨.
  - 전날 시 주석과 바이든 부통령은 예정을 훨씬 넘긴 5시간의 회담 동안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를 놓고 장시간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 지도부는 방공식별구역 설치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측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를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며 바이든 부통령



과 대비되는 입장을 내놨음.

- 한편,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 식별구역을 '일방적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최근 미국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일축했음.

#### 마. 미·일 관계

##### ● <“미·일 TPP 양자협약서 평행선”<日신문>>(12/2, 연합뉴스)

- 일본 매체들은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타결을 위해 지난 1일 양자협의를 했지만 핵심쟁점인 농산물 관세철폐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보도했음.
- 이 자리에서 일본은 쌀, 보리, 설탕, 소·돼지고기, 유제품 등 '중요 5개 품목'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철폐 요구는 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미국 측은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함.
- 이와 관련, 일본 측은 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이들 품목에 대한 별도의 합의 틀을 만들어 일정량을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오는 7~10일 싱가포르에서 TPP 각료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협상 타결의 키를 쥐고 있는 두 나라의 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국이 목표로 하는 연내 타결은 불투명한 상황임.

##### ● <바이든 "中日대화채널 필요...중국에 우려전할 것">(12/3,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중일 간 효과적인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또한 바이든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중시" 전략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우려를 중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교도통신은 바이든 부통령은 회견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관계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으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고 함.
- 한편, 아베 총리와 바이든 부통령은 약 1시간30분에 걸친 전체 회담 중 마지막 20분간 별실로 옮겨 통역만 대동한 채 대화를 가졌다고 함.

##### ● <미·일, 中 방공구역 대응에 '온도차'>(12/6, 연합뉴스)

-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둘러싸고 일본은 중국의 방공구역 설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설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철회보다는 운용 개선에 중점을 두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대응에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음.

- 이 때문에 이날 회담에서는 방공구역 설정을 "묵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쌍방의 입장이 일치했지만 '철회 요구'와 같은 강한 표현은 나오지 않았으며,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미국의 이러한 입장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문제"라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고 분석하고 있음.
- 니혼게이지이 신문은 특히 헤이글 장관이 "방공구역 설정 자체는 새로운 것도, 드문 것도 아니다"고 말한 것은 중국 측 주장에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분석했음.

● <“日 비밀보호법은 군국화 의지…美정부 내심 지지”>(12/7, 연합뉴스)

- 리처드 새뮤얼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국제연구센터 소장은 6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와의 인터뷰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은 아베 신조 총리가 전후 평화헌법 체제에서 탈피해 더 강력한 군사태세를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노력 중 하나라고 진단했음.
-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진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동맹국들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포린폴리시도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지나친 언론규제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분명히 이 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앞서 일본 참의원은 6일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찬성 130표, 반대 82표로 가결했음.

바. 미·러 관계

● <美-러 북핵대표, 6자회담 재개방안 등 논의>(12/5,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5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언론 보도문을 통해 미국을 방문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 이고리 모르쿨로프 외무차관이 3~4일 양일 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했다고 밝혔음.
- 외무부는 양측이 한반도 및 그 주변 정세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 특히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모르쿨로프 차관은 이밖에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과도 면담했다고 덧붙였다.
- 미러 북핵 외교 대표의 회동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음.

사. 중·일 관계

● <日 "중의 일방적 현상변경 안 돼"...방공구역 여론전>(12/2,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맞서 중국을 압박하



는 국제 여론전에 나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을 방문 중인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 후 "국제법의 여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도 이날 조지 잠벨라스 영국 해군 참모장과 만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받았음.
- 한편, 6일 교도통신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와 아세안은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특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음.

● <日 국회 "방공식별구역, 영토주권 침해 행위">(12/6, 연합뉴스)

- 일본 중의원은 6일 본회의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참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려고 조율 중인.
- 일본 중의원은 중국에 대해 "국가의 영토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 라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고 이성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한 뒤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음.
-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 군용기가 긴급발진한 경우 "관계되는 국내법, 국제법에 비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음.

● <아베 中에 정상회담 제안..."우린 서로를 필요">(12/7,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한 인터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했음.
- 아베 총리는 "일·중 관계는 절대 단절될 수 없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면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 때문에 외교 관계가 좌지우지될 수 없다"고 말했음.
- 한편, 홍콩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이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특정 이슈에서 옳은 일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일본이 역사와 현실을 직시해 중국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기를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음.

아. 기 타

● <러시아, 美·中과 잇달아 합동군사훈련 예정>(12/2, 연합뉴스)

- 이타르타스 통신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내년엔 미국, 중국과 잇달아 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보도했음.
- 미국과의 합동훈련은 2014년 7월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양국 지상군의 협력 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음.

- 7월 미군과의 훈련을 끝낸 러시아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병력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따른 지역 안보협력을 위해 연이어 중국과도 합동군사훈련을 벌일 예정이라고 함.

● <中 패권욕의 끝은... "남중국해 난파선 모두 우리 것">(12/2, WSJ)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중국 인근 바다에 대한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침몰해있는 수천 척의 난파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해안 경비대에 자신들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다른 나라의 불법적인 고고학 탐사 행위를 저지하라고 명령했으며, 중국은 이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해양 고고학 프로그램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 중국 관리들은 이를 두고 "중국 유물에 대한 절도와 보물 사냥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는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음.

● <中 방공구역서 中-美日 군용기, 3차례 근접비행>(12/3, 연합뉴스)

- 대만 국방부는 2일 입법원(국회) 보고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후 중국의 군용기와 미국 및 일본 군용기 사이에 3차례 초 근접 비행이 이뤄지는 긴장 상황이 연출됐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와 미·일 군용기 사이의 거리가 1해리(1.852km)까지 좁혀졌으며, 이는 레이더 상으로 점이 중첩되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라고 설명했다.
- 일본 군용기가 85차례, 중국 군용기가 55차례, 미국 군용기가 13차례 각각 이 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포착됐으며, 대만도 30여 차례 이 구역에서 전투기를 운용했음.

● <日, 동중국해서 대만 민항기 41차례 운항 방해>(12/3, 미국의소리)

- 중국시보는 3일, 대만 교통부 민항국은 지난 2009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일본 방공식별구역과 자국의 비행정보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자국 민간 항공기들이 41차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 등으로부터 운항에 간섭을 받았다고 밝혔다.
- 대만 외교부는 민항국이 일본 측에 비행 계획을 사전 통보했는데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일본 측과 이 문제에 대해 엄정한 교섭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민항기의 운항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항공기를 상대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발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푸틴 "북극해서 러 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해야">(12/4,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법학전공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북극해 지역은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곳"이라며 경제·군사적 이유에서 북극해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 러시아는 물론 각국이 북극해에 대한 개발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에는 강하게 반대했음.
  - 한편 러시아는 물론 미국도 북극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자국 해군 함정의 파견을 늘리고 있는 상황임.
  
- <中, 쟈-15 양산 돌입...>"랴오닝호 전력 강화">(12/4, 연합뉴스)
  - 대만 연합보 등은 중국의 글로벌타임스를 인용, 중국 선양 항공기공업 그룹이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에 탑재할 예정인 쟈-15의 대량 생산체제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 신문은 랴오닝호의 핵심 전력인 이 전투기의 양산체제 돌입은 랴오닝호의 전력화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초기 생산 규모는 36대이며, 이미 생산된 일부 전투기는 실전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 이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아시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쟈-15가 남중국해 일대에서 유사시 일본의 석유 수송을 차단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다고 관측했음.
  
- <일본 NSC 공식 출범...장성택·中방공구역 첫 논의>(12/4, 연합뉴스)
  - NHK는 일본 정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공식 출범, '4인 각료회의'를 개최해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연내 작성할 국가안보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음.
  - NSC의 핵심인 '4인 각료회의'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개최됐으며, 의장인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과 함께 아소 다로 부총리도 참석했다고 전해졌음.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4인 각료회의를 2주일에 한 차례 정도 개최할 것"이라며 "외교와 방위, 안보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일원화하는 사령탑 기능을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 <중국군 관계자 "비행계획 통보 안 하면 처벌">(12/5, 연합뉴스)
  - 대만 중국시보는 중국군 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인취 해군 소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직접적으로 지칭해 앞으로도 비행계획 사전 통보를 거부한다면 항공기가 착륙한 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일본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무시 전략'의 하나로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취 소장은 "일본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의 법적 지위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음.
- 앞서 중국 국방부도 지난 3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물체가 명확하게 일정 수준의 위협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 적시에 군용기를 출동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일본, 무기수출 금지원칙 폐지하기로>(12/6,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은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전날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안을 여당에 제시함으로써 1967년 이후 역대정권이 계승해 온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베 내각은 유엔이 정한 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함.
- 방위산업을 성장 동력의 하나로 보는 아베 정권은 최근 방위 장비를 국외에 수출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 <韓방공구역확대에 美 인정...일본도 차분한 대응>(12/8, 연합뉴스)

- 한국이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에까지 확대한 새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한 데 대해 '직접 관련국'인 중국·일본과, 동북아 안보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음.
- 미국 정부는 미리 준비한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사전 협의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일본 정부도 자국 민항기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차분한 대응기조를 보였음.
- 다만 중국과 일본 매체들은 한국의 새 방공구역이 자국 정부가 기존에 설정해둔 방공구역과 겹치는 점을 소개하며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음.
- 정부가 이날 선포한 새로운 KADIZ는 남쪽 부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 홍도, 우리의 관할수역인 이어도까지 포함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유엔 인권대표 "북한의 미국인 억류에 충격받아"(KBS, 12.3)
  - 나비 필레이 유엔(UN) 인권 최고 대표는 미국인 관광객 메릴 뉴먼을 억류하고 있는 북한을 맹비난
  - 필레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군인으로 복무했고, 이제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사과하는 80대 남성이 북한에 강제로 억류돼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북한의 구금 조치에 반대를 표명
  
- 北 통신 "日 정치인 여성인권 논할 자격 없다"(연합뉴스, 12.3)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일본 정치인들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군국화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수치스럽지도 않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여성 인권을 강조한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극우익으로 질주하는 일본이 국제무대에서의 영상(이미지) 올리기 위해 몰두하는 것은 과거청산 없이 군국화로 질주하기 위한 내외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 또 "일본이 도대체 여성 인권 보호와 성폭행 근절에 대해 어찌구저찌구 할 명분이나 있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본이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 말하려면 일본군 성노예 범죄부터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해야 한다"고 언급
  
- 北, 유엔 '정치범 생사확인'에 "고려할 가치도 없다"(연합뉴스, 12.4)
  -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모임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피해자 UN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유엔에 보내온 답변서를 공개
  - 이 단체는 앞서 지난 7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를 통해 수용소 수감자 가족 20명의 생사확인 청원서를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에 제출했고 실무그룹은 해당 청원서를 북한에 보내 답변을 요구
  - 이에 북한은 지난 10월 7일 "청원서의 내용은 고려할 가치도 없고 그것은 남한 당국에 의한 반공화국 모략소동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답변
  - 북한은 답변서에서 "청원서의 사례와 관련한 우리 입장은 수정처럼 투명하고 확고하다"며 청원서의 사례들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 표명
  - 이날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가족이 수용소에 갇힌 또 다른 탈북자 20여



명의 사례를 취합한 청원서를 이달 10일 유엔 실무그룹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

### ● 북, 국경경비대도 마약 일상화(자유아시아방송, 12.3)

- 북한 국경경비대원들 속에서 '얼음'으로 불리는 마약, 필로폰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약을 한 상태에서 경비대원들이 밀수나 인신매매도 하는데 하루에도 두 차례나 마약을 하고 있다고 한 탈북청소년이 증언
- 북한 양강도에서 살다가 올해 초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탈북해 지금은 서울의 한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모 군(17)은 북한에 있을 때 "밀수는 물론 국경경비대원들과 마약도 많이 했다"고 증언
-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밀수꾼들의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밀수꾼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뇌물)을 마약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

### ● 북한 억류 미국인 뉴먼 40여 일 만에 풀려나(자유아시아방송, 12.7)

- 북한이 억류 중이던 고령의 미국인 뉴먼 씨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석방
- 북측은 7일 '적대혐의'로 북한에 억류됐던 85세의 미국인 메릴 뉴먼 씨를 억류 40여일 만에 '추방' 형식으로 중국으로 내보냄.
- 조선중앙통신은 뉴먼 씨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추방했다고 보도
- 비행기 편으로 중국에 도착한 뉴먼 씨는 "집으로 돌아가게 돼 기쁘다"며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아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
- 공항에서 뉴먼 씨를 본 사람들은 "건강상태에 별 이상은 없어 보였다"고 언급
- 이제 관심사는 뉴먼 씨의 석방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맞춰지고 있음.
- 메릴 뉴먼 씨는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서울 방문 일정 마지막 날에 풀려났는데, 바이든 부통령은 석방에 대한 역할을 부인하면서도 뉴먼 씨의 석방 조치를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으나, "북한이 케네스 배 씨 역시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메릴 뉴먼 씨가 북한을 떠나 가족과 재회하도록 허용된데 대해 기쁘다"고 밝히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케네스 배 씨도 특별사면하고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2. 북한인권

### ● 국제투명성기구 '북한, 가장 부패한 국가'(미국의 소리, 12.3) [붙임 1]

- 북한이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 선정
-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오늘 (3일) 전 세계 177개국



을 대상으로 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

- 북한은 지난 2011년부터 부패인식지수 평가 국가에 포함
- 부패인식지수는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0점 만점 기준으로 부패 인식지수를 평가했고, 2012년부터 평가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변경

● "북한 요덕수용소 규모 축소"(연합뉴스, 12.5)

- 5일 CNN 인터넷 판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촬영된 디지털 글로브사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남도 요덕 수용소(15호 관리소)에서 39개의 주거용 건물이 철거되고 6개의 새 주거용 건물이 들어서 규모가 작아졌다고 설명
- 이는 이곳에 갇힌 수용자가 줄었음을 시사
-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보고서에서 이곳에 5만 명이 수용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정치범 수용소 정책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 실제로 16호 관리소로 알려진 함경북도 화성 수용소는 새 주거용 건물이 지어지는 등 오히려 규모가 다소 확대
- 위성사진은 2만여 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수용소에서 자원 채굴, 벌목, 농업 등의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화성 수용소의 규모는 약 560km<sup>2</sup>로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세 배에 달하며, 요덕과 화성 수용소의 위성사진에는 모두 통제용 담과 감시 초소 등의 모습이 드러남.
-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는 (북한) 당국이 당장 모든 수용자를 석방하고 수용소를 폐쇄하기를 요구한다"며 "어린이를 포함한 20만 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끔찍한 조건에서 수용돼 있다"고 주장

● 한반, 9일 북한인권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뉴스, 12.6)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을 맞아 오는 9일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
- '북한인권 문제 공감대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1부)과 북한인권법의 바람직한 제정방안(2부)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
- 박경서 UN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은 예술·체육·종교 등 사회문화 교류 촉진 방안을, 김홍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
- 바람직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관련해선 이재원 변호사와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

● 서울서 북한인권 토론회 잇달아(자유아시아방송, 12.6)

- 한국과 일본 등 40여개 인권단체의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



- 연대(ICNK)와 한국의 민간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오는 9일 서울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통한 북한인권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
- 이번 행사에는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로, 발칸의 도살자로 불리는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던 제프리 니스 경(Sir Geoffrey Nice)이 참석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예측하는 시간이 있음.
  - 이번 국제회의에는 한국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제라드 겐서 국제법 변호사와 벤 로저스 영국 세계기독교연대(CSW) 동아시아팀장, 데이비드 호크 전 북한인권위원회 조사관,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즈워치 동아시아팀장 등이 참석
  - 한국 측에서는 이정훈 인권대사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박사, 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
  - 한편 한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오는 10일 서울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
  -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단속과 강제송환, 그리고 북한의 강제송환 탈북자 처우와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논의하고 강제복송을 직접 경험한 탈북자의 증언도 청취할 예정
- **미 인권특사 "방북 추진 중...북한 무응답 일관"(미국의 소리, 12.7)**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송환을 위해 방북을 계속 추진 중이나, 북한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함.
  - 로버트 킹 특사는 5일 북한인권 행사가 열린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지난 8월 무산된 평양 방문을 지속적으로 타진 중이며,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언제든지 방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
  - 특히 지난 달 한국과 중국, 일본 순방을 앞두고도 방북 허가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3. 탈북자

- **양평뿔, 15년 전에 헤어진 탈북자 가족 상봉(뉴스타운, 12.5)**
-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거주 탈북자 김 모 씨(여, 74세, 가명)는 15년 전인 1998년 탈북 시도 과정에서 딸(당시 32세)과 중국에서 헤어지게 된 후, 탈북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중국 공안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딸의 생사도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2009년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
  -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양평경찰서 보안계 권영길 경사는 순천경찰서에



서 딸이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양측에 확인한 결과 15년 전 헤어진 딸임을 확인하고 만나게 해줌.

- 김 모 씨는 "생사도 모른 채 생이별한 딸이 너무나 그리웠는데 사랑하는 딸을 찾게 해준 대한민국 경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달

#### ● 킹 미 북한인권특사 "최근 탈북자 급감 우려"(미국의 소리, 12.6)

-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5일 민간단체인 '인사이드 NK USA' 가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탈북자들의 열악한 삶에 우려를 표명
- 이어 북-중 국경지역의 경비 강화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크게 감소하여 지난 해 입국한 탈북자는 1천 5백여 명으로 1천 명가량 줄었고 올해 역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 킹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이런 우려들을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함.
- 14호 개천관리소 출신 탈북자인 신동혁 씨가 최근 워싱턴에 세운 'Inside NK'는 이날 탈북자들의 삶을 다룬 다큐 영화 '탈북자: 조선탈출'을 상영하고 감독 등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개최
-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슈먼 회장은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사회가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킹 특사와 거슈먼 회장은 이날 행사를 주최한 신동혁 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격려

##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 5. 납북자

#### ● 日언론 "장성택 실각했다면 납북자협상에 영향"(연합뉴스, 12.4)

- 일본 매체들은 4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통하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북 협상에 미칠 영향 등에 주목
- 전날 한국 국정원 발로 전해진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특히 "납치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도 지난 민주당 정권(2009~2012년) 이후 일본 정부는 장씨를 '정권 내 최대 실력자'로 간주해왔다"라고 소개하고 나서 그의 실각은 일본에게 중요한 협상 상대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진단

#### ● 통일장관, 귀환 납북자 6명과 간담회(연합뉴스, 12.4)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4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전후(戰後) 납북자



- 6명과 오찬 간담회 개최
  - 귀환납북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서의 생활과 국내 귀환·정착 과정 등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설명하고 아직 남은 납북지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고 통일부가 전달
  - 류 장관은 이에 귀환납북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
  - 통일부 장관이 전후 납북지들과 공식적으로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
- **국내서 '납북자 접촉 일본인' 포착...자진출국(연합뉴스, 12.6)**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올해 국내에서 한 일본인이 탈북자를 접촉해 일본인 납치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6일 밝힘.
    -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남 원장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간에 떠돌던 일본인 스파이 추방설과 관련해 이 일본인이 자진 출국했다고 보고했으나 신원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함.

##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경기도, 유진벨 재단과 북한 결핵 치료 후원 협약(미국의 소리, 12.2)**
  - 한국 경기도가 오늘(2일) 대북 지원단체인 유진벨 재단과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사업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
  -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물품구입비를 지원하고 유진벨 재단은 물품구입과 반출입, 치료 활동 등을 담당
  - 유진벨 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북한 내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시작해 최근까지 1천여 명을 치료했고 현재도 900여 명을 치료 중
- **통일부, 3개 민간단체 대북지원 물자반출 승인(연합뉴스, 12.6)**
  - 통일부는 6일 3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지원물품 반출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힘.
  - 승인을 받게 되는 3개 민간단체는 '섬김', '한국카리타스', '나눔인터내셔널'이며, 지원대상은 주로 북한 탁아소, 유치원 등의 영유아 및 군 단위 인민병원 환자들
  - 이들 단체는 영양빵 재료, 어린이 내복 등 방한의류, 기초의약품 등을 지원물품으로 북한에 보낼 예정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앞으로 기존 신청단체들에 대해서도 승인조건



이 충족되는 대로 계속 승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 **WFP, 대북 식량지원사업 긍정평가(자유아시아방송, 12.6) [별첨 1]**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1년 동안 9만 2천700톤의 곡물을 북한에 들여가 어린이와 임산부 약 190만 명의 영양상태 개선을 지원했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진행한 식량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기금 출연국가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은 6일 대북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Performance Assessment of "Nutrition Support to Women and Children" PRRO200114)를 모금에 참여한 국가와 국제기구에 제출
  - 보고서는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개월간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양지원의 성과를 평가
  - 북한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영양강화 식품으로 임산부 영양실조와 어린이의 저체중 또는 저성장 등 만성영양장애를 극복하도록 지원했다고 설명
  - 또한 유아의 영양실조(Wasting) 비율이 2009년 5.2%에서 2012년 4%로 떨어지면서 국제보건기구가 분류하는 고위험군에서 벗어났으며 같은 기간 저체중 비율은 18.8%에서 15.2%로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저성장 발육부진 비율은 32.4%에서 27.9%로 개선됐다고 소개
  - 보고서는 세계식량계획의 영양강화 식품을 지원 받은 약 190만 명의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영양상태 개선의 성과를 올렸지만 당초 목표했던 240만 명의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50만여 명은 유엔의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비용부족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 세계식량계획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지원 사업을 지원한 국제사회 모금액이 약 4천440만 달러였다면서 필요 비용의 33%가 부족했다고 지적
  - 국제모금은 유엔의 자금지원이 1천3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800만 달러, 스위스가 520만 달러 순
  - 올해 6월로 기한이 끝난 북한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지원 사업을 2년 연장해서 2015년 6월까지 북한의 취약계층 240만 명에 영양강화 식품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모금 부족으로 실제 지원 규모는 목표의 30% 수준
  
- **중국, 100만 달러 대북 식량 지원(미국의 소리, 12.7)**
  - 중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에 미화 100만 달러를 기부
  - WFP는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8개 도 85개 군에서 239만 3천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데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탁아소와 유치원, 소아병동, 기숙학교, 인민학교 어린이들, 임산부와 수유모들
  - WFP는 현재 대북 식량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7월 시작해 2년간 진행되는 사업에 약 2억 달러가 (199,896,631) 필요하지만 12월6일 현재 전체 예산의 9.3%인 1천8백 53만 달러 밖에 모금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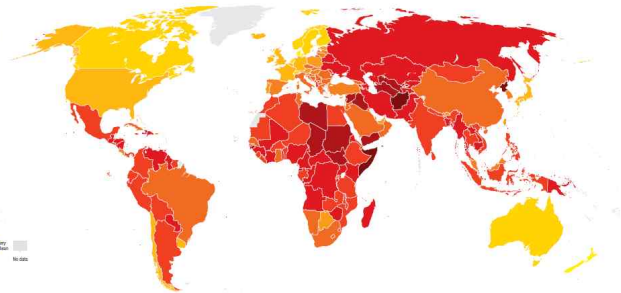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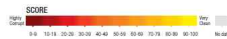
### 8. 북한동향

- '보안법' 제정('48.12.1) 65주년 즈음 '보안법이 뿌리박고 있는 한 인권유린행위는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며 '보안법 철폐는 유신독재가 되살아난 남조선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 (12..2, 중통 · 노동신문/보안법은 전대미문의 반민족적 파쇼악법)
- 【北 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12.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수사 등 관련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행위와 중세기적인 중북몰이 광기를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로 낙인한다'며 '사탄을 몰아내는 정의의 성전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라며 '反정부 투쟁' 선동(12..2, 중통 · 평방)
-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총대변인 담화(12.3)】 南 집권세력이 '각계층의 대중투쟁을 '중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며 "문예인들이 정의의 기수가 되어 민주 · 통일을 위한 선봉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南 문예인들의 '反정부 투쟁' 선동(12.3, 중통 · 중방)

[붙임 1]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3.

**177 COUNTRIES.  
177 SCORES.  
HOW DOES  
YOUR COUNTRY  
MEASURE UP?**

The perceived levels of public sector corruption in 177 countries/territories around the world.



RANK	COUNTRY/TERRITORY	SCORE	RANK	COUNTRY/TERRITORY	SCORE	RANK	COUNTRY/TERRITORY	SCORE
1	Denmark	91	20	Paraguay	71	101	Guatemala	31
2	New Zealand	81	21	Spain	71	102	Chad	21
3	Finland	80	22	Austria	69	103	Yemen	20
4	Sweden	79	23	Latvia	68	104	South Sudan	20
5	Norway	78	24	Qatar	68	105	Chad	19
6	Singapore	78	25	Qatar	68	106	Equatorial Guinea	19
7	Switzerland	78	26	Qatar	68	107	Yemen	19
8	Netherlands	77	27	Qatar	68	108	Yemen	18
9	Hong Kong	77	28	Qatar	68	109	Yemen	17
10	Denmark	77	29	Qatar	68	110	Yemen	17
11	Denmark	77	30	Qatar	68	111	Yemen	17
12	Denmark	77	31	Qatar	68	112	Yemen	17
13	Denmark	77	32	Qatar	68	113	Yemen	17
14	Denmark	77	33	Qatar	68	114	Yemen	17
15	Denmark	77	34	Qatar	68	115	Yemen	17
16	Denmark	77	35	Qatar	68	116	Yemen	17
17	Denmark	77	36	Qatar	68	117	Yemen	17
18	Denmark	77	37	Qatar	68	118	Yemen	17
19	Denmark	77	38	Qatar	68	119	Yemen	17
20	Denmark	77	39	Qatar	68	120	Yemen	17
21	Denmark	77	40	Qatar	68	121	Yemen	17
22	Denmark	77	41	Qatar	68	122	Yemen	17
23	Denmark	77	42	Qatar	68	123	Yemen	17
24	Denmark	77	43	Qatar	68	124	Yemen	17
25	Denmark	77	44	Qatar	68	125	Yemen	17
26	Denmark	77	45	Qatar	68	126	Yemen	17
27	Denmark	77	46	Qatar	68	127	Yemen	17
28	Denmark	77	47	Qatar	68	128	Yemen	17
29	Denmark	77	48	Qatar	68	129	Yemen	17
30	Denmark	77	49	Qatar	68	130	Yemen	17
31	Denmark	77	50	Qatar	68	131	Yemen	17
32	Denmark	77	51	Qatar	68	132	Yemen	17
33	Denmark	77	52	Qatar	68	133	Yemen	17
34	Denmark	77	53	Qatar	68	134	Yemen	17
35	Denmark	77	54	Qatar	68	135	Yemen	17
36	Denmark	77	55	Qatar	68	136	Yemen	17
37	Denmark	77	56	Qatar	68	137	Yemen	17
38	Denmark	77	57	Qatar	68	138	Yemen	17
39	Denmark	77	58	Qatar	68	139	Yemen	17
40	Denmark	77	59	Qatar	68	140	Yemen	17
41	Denmark	77	60	Qatar	68	141	Yemen	17
42	Denmark	77	61	Qatar	68	142	Yemen	17
43	Denmark	77	62	Qatar	68	143	Yemen	17
44	Denmark	77	63	Qatar	68	144	Yemen	17
45	Denmark	77	64	Qatar	68	145	Yemen	17
46	Denmark	77	65	Qatar	68	146	Yemen	17
47	Denmark	77	66	Qatar	68	147	Yemen	17
48	Denmark	77	67	Qatar	68	148	Yemen	17
49	Denmark	77	68	Qatar	68	149	Yemen	17
50	Denmark	77	69	Qatar	68	150	Yemen	17
51	Denmark	77	70	Qatar	68	151	Yemen	17
52	Denmark	77	71	Qatar	68	152	Yemen	17
53	Denmark	77	72	Qatar	68	153	Yemen	17
54	Denmark	77	73	Qatar	68	154	Yemen	17
55	Denmark	77	74	Qatar	68	155	Yemen	17
56	Denmark	77	75	Qatar	68	156	Yemen	17
57	Denmark	77	76	Qatar	68	157	Yemen	17
58	Denmark	77	77	Qatar	68	158	Yemen	17
59	Denmark	77	78	Qatar	68	159	Yemen	17
60	Denmark	77	79	Qatar	68	160	Yemen	17
61	Denmark	77	80	Qatar	68	161	Yemen	17
62	Denmark	77	81	Qatar	68	162	Yemen	17
63	Denmark	77	82	Qatar	68	163	Yemen	17
64	Denmark	77	83	Qatar	68	164	Yemen	17
65	Denmark	77	84	Qatar	68	165	Yemen	17
66	Denmark	77	85	Qatar	68	166	Yemen	17
67	Denmark	77	86	Qatar	68	167	Yemen	17
68	Denmark	77	87	Qatar	68	168	Yemen	17
69	Denmark	77	88	Qatar	68	169	Yemen	17
70	Denmark	77	89	Qatar	68	170	Yemen	17
71	Denmark	77	90	Qatar	68	171	Yemen	17
72	Denmark	77	91	Qatar	68	172	Yemen	17
73	Denmark	77	92	Qatar	68	173	Yemen	17
74	Denmark	77	93	Qatar	68	174	Yemen	17
75	Denmark	77	94	Qatar	68	175	Yemen	17
76	Denmark	77	95	Qatar	68	176	Yemen	17
77	Denmark	77	96	Qatar	68	177	Yemen	17
78	Denmark	77	97	Qatar	68	178	Yemen	17
79	Denmark	77	98	Qatar	68	179	Yemen	17
80	Denmark	77	99	Qatar	68	180	Yemen	17
81	Denmark	77	100	Qatar	68	181	Yemen	17
82	Denmark	77	101	Qatar	68	182	Yemen	17
83	Denmark	77	102	Qatar	68	183	Yemen	17
84	Denmark	77	103	Qatar	68	184	Yemen	17
85	Denmark	77	104	Qatar	68	185	Yemen	17
86	Denmark	77	105	Qatar	68	186	Yemen	17
87	Denmark	77	106	Qatar	68	187	Yemen	17
88	Denmark	77	107	Qatar	68	188	Yemen	17
89	Denmark	77	108	Qatar	68	189	Yemen	17
90	Denmark	77	109	Qatar	68	190	Yemen	17
91	Denmark	77	110	Qatar	68	191	Yemen	17
92	Denmark	77	111	Qatar	68	192	Yemen	17
93	Denmark	77	112	Qatar	68	193	Yemen	17
94	Denmark	77	113	Qatar	68	194	Yemen	17
95	Denmark	77	114	Qatar	68	195	Yemen	17
96	Denmark	77	115	Qatar	68	196	Yemen	17
97	Denmark	77	116	Qatar	68	197	Yemen	17
98	Denmark	77	117	Qatar	68	198	Yemen	17
99	Denmark	77	118	Qatar	68	199	Yemen	17
100	Denmark	77	119	Qatar	68	200	Yemen	17



RANK	COUNTRY/TERRITORY	SCORE	RANK	COUNTRY/TERRITORY	SCORE	RANK	COUNTRY/TERRITORY	SCORE
91	Morocco	37	114	Indonesia	32	157	Zimbabwe	21
91	Sri Lanka	37	116	Albania	31	160	Cambodia	20
94	Algeria	36	116	Nepal	31	160	Eritrea	20
94	Armenia	36	119	Vietnam	31	160	Venezuela	20
94	Benin	36	119	Mauritania	30	163	Chad	19
94	Benin	36	119	Mozambique	30	163	Equatorial Guinea	19
94	Colombia	36	119	Sierra Leone	30	163	Guinea-Bissau	19
94	Djibouti	36	119	Timor-Leste	30	163	Haiti	19
94	India	36	123	Belarus	29	167	Yemen	18
94	Philippines	36	123	Dominican Republic	29	168	Syria	17
94	Suriname	36	123	Guatemala	29	168	Turkmenistan	17
102	Ecuador	35	123	Togo	29	168	Uzbekistan	17
102	Moldova	35	127	Azerbaijan	28	171	Iraq	16
102	Panama	35	127	Comoros	28	172	Libya	15
102	Thailand	35	127	Gambia	28	173	South Sudan	14
106	Argentina	34	127	Lebanon	28	174	Sudan	11
106	Bolivia	34	127	Madagascar	28	175	Afghanistan	8
106	Gabon	34	127	Mali	28	175	Korea (North)	8
106	Mexico	34	127	Nicaragua	28	175	Somalia	8
106	Niger	34	127	Pakistan	28			
111	Ethiopia	33	127	Russia	28			
111	Kosovo	33	127	Dem. Rep. of Congo	22			
				Tajikistan	22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22			

●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제공